

최근 1개년 기출은 가장 가까운 미래다
2023년 1개년 신경향 기출을 단원별로 완벽 정제한

2024
김종규
최근 1개년
기출문제
선행정학



2024 김중규 최근 1개년 기출문제 선행정학을 펴내며

신경향 기출은 가까운 미래다, 행정학 기출혁명

수험생 여러분, 바야흐로 기출문제 시즌입니다. 행정학은 기출문제 커리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할 만큼 이제부터는 기출문제 분석과 훈련에 주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출문제는 오래된 문제보다 최근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기출추록은 단순한 추록이 아니라 2023년 1년동안 치러진 각종 기출문제 340여 문제(9급/ 7급 등 모든 기출문제)를 상세한 해설 및 이론정리표와 함께 단원별로 수록하여, 이 교재만으로도 행정학 전반을 신경향중심으로 일별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등 최근 개정법령과 통합재정 포괄범위 변경, 자치경찰제 실시, 주민참여제도 개편 내용 등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최근 1개년 기출집은 최근 기출문제에서 나타난 새로운 이슈와 이론들을 토대로 앞으로 출제 외연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주제들(통합재정, 특별지방자치단체, 넛지이론 재정준칙 등)에 대한 예상유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추록에 실린 기출문제는 총13종 340여 문제로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 경정승진(2023.1.15.)
2. 2023 국가9급(2023.4.8.)
3. 2023 국회8급(2023.4.22.)
4. 2023 행정사(2023.6.3.)
5. 2023 지방·서울9급(2023.6.10.)
6. 2023 군무원9급(2023.7.15.)
7. 2023 군무원7급(2023.7.15.)
8. 2023 경찰간부(2023.7.30.)
9. 2023 국가7급(2023.9.23.)
10. 2023 국가7급 인사조직론(2023.9.23.)
11. 2023 해경간부(2023.10.21.)
12. 2023 지방7급(2023.10.28.)
13. 2023 지방7급 지방자치론(2023.10.28.)

이 책의 내용과 순서

C O N T E N T S

제1장 행정학의 기초이론

공공재로서의 행정	15
행정과정	16
행정과 정치	17
시민사회와 제3섹터, NGO	19
사회적 자본	20
현대행정의 특징	21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정부관	22
시장실패	23
정부규제	24
정부실패	25
공공재의 적정 공급규모	27
공공부문의 민간화	29
행정이념의 변천과 관계	31
행정의 본질적 가치	33
행정의 수단적 가치	36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	40
행태론적 접근	41
비교행정론	42
공공선택이론	43
신제도론	45
신공공관리론	46
거버넌스론	47
신공공서비스론	49
탈신공공관리론	50
넛지이론	51
행정이론 종합	52

제2장 정책론

정책의 본질과 유형	59
정책의제의 설정	63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이론모형	64
정책네트워크 모형	67
정책목표	68
정책대안의 탐색과 평가	69
체제분석	70
관리과학	71
직관적 예측	72
불확실성과 미래예측	73
개인차원의 의사결정모형	74
집단차원의 의사결정모형	78
정책결정모형 종합	82
정책집행이론	83
정책평가의 유형과 방법	89
정부업무평가	90
인과관계, 변수 및 타당성	91
정책평가의 방법 : 실험	93
정책변동과 환류	95

01

중요도 ■■■ 난이도 ■■■□

2023 군무원7급

롤스(J. Rawls)가 주장한 사회 정의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② ‘차등 원리’란, 저축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③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리’란,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④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리’와 ‘차등 원리’가 충돌할 때에는 후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2024 선행정학 p.87

정답·해설

답 ④

차등 조정의 원리는 2차적 기준으로서, 롤스는 제1의 원리 즉 동등한 자유의 원리가 제2의 기준인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에 우선한다고 보았으며, 제2의 원리 중에서도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에 우선한다고 보았다.

- ☑ ① [o] 제1의 원리인 동등한 자유의 원리에 대해 올바르게 기술한 설명이다.
- ② [o] 저축원리란 제2의 원리 중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익이 많이 돌아가도록 배분하는 차등의 원리(Maximin principle)를 구현하는 것에 있어, 이익의 일정 부분은 장래 세대의 복지를 위하여 저축, 유보 되어야 한다는 정의로운 저축원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최소극대화 원칙은 저축원리와 양립하는 범위에서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③ [o] 제2 원리 중 기회균등의 원리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정의의 원리(J.Rawls)

제1의 원리 (동등한 자유의 원리)	다른 사람의 동일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짐	
제2의 원리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 → 차등조정 원리	기회균등의 원리	직무와 지위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야 함
	차등의 원리	불평등의 시정은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극빈층)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함(최소극대화원리 : Maximin)

* Rawls는 중도적 입장에서 원초적 상태(무지의 베일)하에서 도출된 정의의 원리가 공정한 원리라고 주장(사회계약론과 유사)
 *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며, 제2원리 중에서도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에 우선

02

중요도 ■■■ 난이도 ■■■□

2023 행정사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익과 차별화되는 공익의 존재를 인정하는 실체설은 공익이 행정의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ㄴ. 실체설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행정의 조정자 역할을 강조한다.
- ㄷ. 과정설은 이해당사자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규범적 절대가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 ㄹ.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준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과정설에 해당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24 선행정학 p.82

정답·해설

답 ②

- ㄱ, ㄹ만 옳은 설명이다.
- ☑ ㄱ [o] 실체설은 공익이란 사익의 합이 아니며 공공선이나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 ㄴ [x] 정부의 중립적·소극적 조정자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과정설이다. 실체설은 정부의 적극적인 국민관 역할을 강조한다.
- ㄷ [x] 공공선이나 도덕적·규범적 절대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실체설의 입장이며 과정설은 공익을 적법절차의 준수 결과로 본다.
- ㄹ [o]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민주적인 참여와 조정 과정을 통해 공익의 도출을 중시하는 과정설과 연관된다.

01 중요도 ■■■ □ 난이도 ■■■ □

2023 국가7급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방법인 추세연장(extrapolation) 예측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미래 사회의 상태를 예상하는 방법이다.
- ② 추세연장의 주요 방법에는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 교차영향행렬(cross-impact matrix) 분석이 있다.
- ③ 지속성(persistence), 규칙성(regularity), 자료의 신뢰성(reliability) 및 타당성(validity)의 가정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④ 추세연장 예측 분석을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가 주로 사용되며, 인구감소, 경제성장, 기관의 업무량 등을 예측하는 데 이용된다.

2024 선행정학 p.239

정답 ·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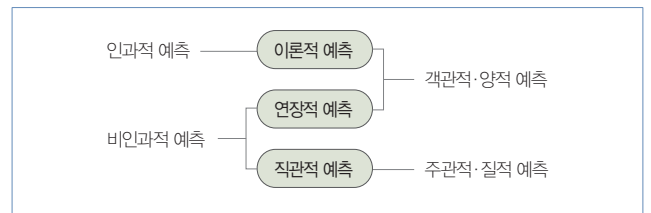
답 ②

교차영향행렬 분석은 연장적 예측(투사)이 아니라 직관적 예측(추측)기법에 해당한다. 교차영향분석이란 연관된(종속적) 사건의 발생여부에 기초하여 조건확률을 이용, 미래 특정사건의 발생확률을 추정하는 직관적 예측기법이다.

- ☑ ①④ [○] 추세연장은 과거 자료에 대한 경향(추세)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미래의 상태를 귀납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이다.
- ③ [○] 지속성, 규칙성(선형성), 신뢰성 및 타당성의 가정이 충족되어야 과거 시계열 자료를 통해 미래의 일정한 경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미래예측의 유형

유형	개념	기법
이론적 예측 (예견) Predict	이론적 모형을 통한 인과적·연역적 예측	선형계획, 투입산출분석, 상관분석, 구간추정, 이론지도, 경로분석, 회귀분석, 상관분석, 선형회귀분석, 인과분석, PERT, CPM, 시나리오 분석 등
연장적 예측 (투사) Project	추세연장·경향분석 등을 통한 귀납적 예측	외삽법, 시계열분석(경향분석), 구간의 추정, 선형경향추정 등
직관적 예측 (추측) Conjecture	주관적 견해에 의존하는 판단적·질적 예측	브레인스토밍, 전통적 델파이, 정책델파이, 교차영향분석, 실현가능성 분석, 역사적 유추, 비계량적 시나리오 분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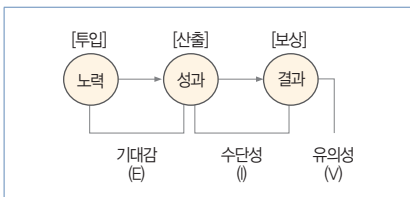


조직이론과 인간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은 주로 경제적 유인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고 본다.
- ② 사회적 인간관은 경제적 유인보다 개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강조함으로써 조직보다는 인간중심의 자율적 문제해결을 촉진한다.
- ③ 자아실현적 인간관을 대표하는 이론에는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과 아지리스(Argyris)의 성숙인 등이 있다.
- ④ 복잡한 인간관은 인간의 동기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V.Vroom의 동기기대이론(VIE이론)

동기부여는 기대감(E)·수단성(I)·유의성(V)의 곱의 함수



배부름-투기산수보유

- ① 기대감(E): 노력·능력을 투입하면 성과가 있을거라는 주관적인 기대감(기대치)
- ② 수단성(I): 성과(1차 산출)가 바람직한 보상(2차 산출·결과)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주관적인 정도(도구성)
- ③ 유의성(V): 보상(2차 산출이나 결과)의 중요성에 대한 주관적인 선호(매력)의 강도(유인성)

Herzberg의 욕구충족 2개 요인

- ① 불만요인(위생요인)과 만족요인(동기요인)은 서로 별개(독립)
- ② 불만의 역이 곧 만족은 아니며 만족요인이 충족되어야 동기부여(생산성 증대)가 됨

요인	위생요인(불만요인)	동기요인(만족요인)
성격	물리적·환경적·대인적 요인(직무맥락 및 근무환경요인)	사람과 직무와의 관계(직무요인) 직무 그 자체를 의미 ←
예	임금, 지위, 안전, 작업조건, 인간관계, 직무확대 등	성취감, 책임감, 승진, 인정감, 성장 및 발전, 직무충실 등

2024 선행정학 p.326

Adams의 공정성이론

투입과 산출의 일치	공평	아무런 행동이 유발되지 않음	
투입과 산출의 불일치(과다보상 or 과소보상)	불공평→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하여 행동	투입·산출의 변경	더 열심히 일하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음
		투입·산출에 대한 지각변경	준거인이 자신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았거나 일했을 거라고 생각을 바꿈
		준거인물 변경	비교대상 교체

정답·해설 답 ②

- ②는 사회인관이 아니라 **자아실현인관**에 대한 설명이다.
- ☑ ① [o]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은 주로 경제적 유인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고 보는 고전적 조직론의 인간관이다.
- ③ [o] 자아실현적 인간관을 대표하는 이론에는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 아지리스(Argyris)의 성숙인과 허즈버그(Herzberg)의 동기요인 등이 있다.
- ④ [o] 복잡한 인간관은 인간의 확일적 동기를 가정하지 않고 동기가 상황에 따라 변이적이라고 본다.

01 중요도 ■■■ 난이도 ■■■

2023 국가9급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입과 세출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②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
- ③ 정부의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의 분류체계이다.
- ④ 통합재정 산출 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세입·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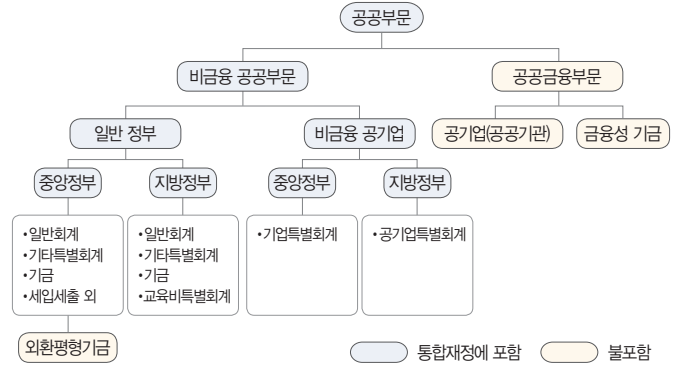
정답 · 해설

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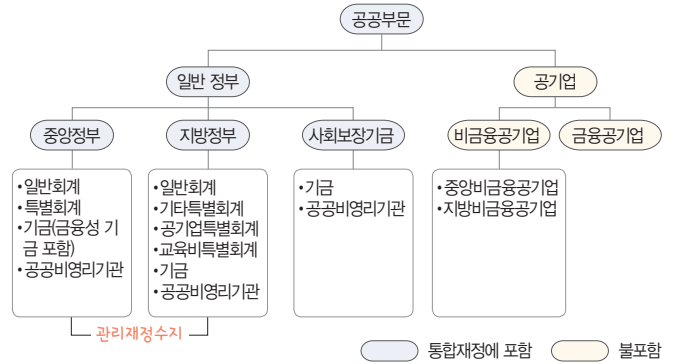
통합재정의 범위에 일반정부 부문(정부기관 및 공공비영리기관, 금융성기금 등)은 모두 포함되지만 공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공공부문 전체가 통합재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통합재정 포함범위가 2001 IMF GFSM(재정통계편람)의 적용으로 회계단위기준에서 일반정부 중심의 제도단위기준으로 변경된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 ① [○] 세입과 세출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경상거래(단기적·소모적 계정)와 자본거래(장기적·투자적 계정)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③ [○] 정부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종합적 예산분류체계이다.
- ④ [○] 정부재정 전체의 순수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계형식으로 작성된다.

통합재정의 범위(회계단위기준, 1986 IMF GFSM) - 종전



통합재정의 범위(제도단위 기준, 2001 IMF GFSM) - 현재



통합재정수지 작성방식 및 기준 변경

구분	1986 GFSM	2001 GFSM
분석단위	회계단위(재정기능과 직접 관련된 거래만 포함)	제도단위(일반정부부문 수행하는 모든 활동 포함)
통계기록방식	현금주의(현금의 흐름만 포함)	발생주의(자산, 부채의 변동 등 경제적 사건 기록)
포괄 범위	개요	재정채과 무관한 금융활동 제외
	금융성 기금, 외환평형기금	제외
	공공비영리기관	제외

주의

[일반정부 통합재정과 중앙정부 통합재정]

- 일반정부 통합재정 : 금융성 기금 포함 (by 2001 IMF GFSM)
- 중앙정부 통합재정 : 금융성 기금 불포함 (by 「국가재정법 시행령」)

01 중요도 ■■■ 난이도 ■■■

2023 국가9급

2021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 제도는?

- ① 주민소환
- ② 주민의 감사청구
- ③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 ④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관련 의견 제출

2024 선행정학 p.852

정답·해설

답 ④

종래에는 주민조례개폐청구만 인정되고 규칙에 대해서는 의견제출이 불가능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2021.12. 개정, 2022.1.13. 시행)」에 의하여 주민들이 자치단체 장에게 규칙 개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규칙개폐의견 제출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 ①②③ [×] 기존의 「지방자치법」에도 규정되었던 제도들이다.

☑ 주민규칙개폐 의견제출제도 (2022.1.13. 시행)

- ① 주민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단,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함.
- ③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내용(2022.1.13. 시행)

내용	개정	
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를 두지 않도록 함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군과 자치구)를 두지 않도록 함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의 자율화	일률적인 기관대립형 ⇒ 기관구성형태(단체장 선임방법 등 포함)를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로 달리할 수 있도록 함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신설	① 증복배분 금지의 원칙 : 비경합의 원칙 ② 보충성의 원칙 : 기초단체 우선 ③ 포괄적 배분의 원칙 : 자기 책임하에 종합처리	
자치단체의 사무 예시규정 개정	가족관계등록사무 자치단체의 사무에서 삭제됨	
주민조례개폐청구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	법적 근거만 남기고 청구권자, 청구대상, 청구요건 및 절차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주민조례발안법	
주민규칙개폐의견제출제도 도입	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폐지 의견을 단체장에게 제출 가능 ⇒ 단체장은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주민감사 청구제도 개선	청구연령	19세 ⇒ 18세 이상 주민
	연대서명 인원 축소	다음 인원 이내 조례로 정한 수 이상 ① 시·도 : 500 ⇒ 300명 ② 인구 50만 이상 시 : 300 ⇒ 200명 ③ 그 밖의 시·군·자치구 : 200 ⇒ 150명
	청구시효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부터 2년 ⇒ 3년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	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	지방의원 정수의 1/2범위에서 조례로 지방의원의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및 의회 운영의 자율화	사무직원에 대한 입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직접 처리하도록 함 지방의회 의안 발의요건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자율화(단체장과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 지방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	
중앙과 지방간 협력 강화	국가와 지방간 협력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률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동(의장 :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명령 과 재의요구 등 적법성 통제 강화	자치사무에 관한 기초단체장의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취소·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기초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주무장관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직접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특례시(인구100만) 도입 등 대도시 특례의 다양화	① 기존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기존 특례 뿐 아니라 ②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에도 특례 인정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도 특례 인정 * 특례는 법률로 정함 ⇒ 지방분권법(부시장 2인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설치규정 마련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함 ②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자치단체장직 인수위 설치규정 마련	① 위원장 1인 포함, 시·도는 20인, 시·군·구는 15인 이내 ② 당선일부터 임기 개시후 20일까지 활동 가능	



고객 HOT LINE

온라인 강의 www.kaspa.co.kr TEL. 02-532-5280~1
gong.conects.com

오프라인 강의 공단기고시학원 TEL. 02-812-6521

펴낸날 2024판 2023년 11월 10일

펴낸이 김중규

펴낸곳 (주)카스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해나하우스 B동 601호

도서문의 TEL. 02-532-5314

등록번호 제2015-000214호

